

韓日關係史研究 제69집

【연구노트】

#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근대사 기술

현 명 철

韓日關係史學會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2020年 08月

#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근대사 기술

현 명 철\*

## ◆ 차례

1. 들어가며
2. 근대사 기술의 논쟁점
3. 나가며

## 1. 들어가며

본연구노트는 대상 교과서(『詳說 日本史B』와 『詳說 世界史B』)에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 기술을 번역하고 내용상 오류 혹은 인식의 차이 등을 검토한 작업 일부이다.

돌이켜보면 1998년 한일 양국의 교과서를 이해하자는 취지의 한일공동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로 「한국 역사 교과서의 근세 한일 관계사 서술」<sup>1)</sup>을 발표한 이래 교과서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1년 후소샤 교과서 파동 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에 합류하게 되면서 교과서 분석이 내 연구의 한 부분으로 운명처럼 다가왔다고 생각한다<sup>2)</sup>.

---

\* 서울대학교

1) 현명철, 「高校國史教科書の近世韓日關係史敘述」, 『日本と韓國の歴史教科書を讀む視點』, 東京: 歴史教育研究會刊, 梨の木舎, 2000년 3월.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 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동북아재단 총독부 교과서 분석 프로젝트(2008~2013)에 참여한 경험은 역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의 이해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역사의식은 때로는 사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를 억압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깨닫게 되었다. 교과서의 기술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유를 갖고 책을 발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토론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공감을 형성해야 함을 겨우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연구노트는 개항기 선조들의 고민과 결정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개항사를 기술하고 싶은 나의 조그마한 소망을 일본 역사교과서 비판을 통해 밝혀본 것이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비망록이다.

대상 교과서의 한국과 관련이 있는 기술 내용을 번역한 결과, 분량으로 보면 약 25000자, 원고지 135매에 해당된다(번역문 기준, 표 제외). 시대 순으로 보면 고대 6700자, 중세 7040자, 근대 7990자, 현대 3190자가 된다. 비교적 전 시대에 걸쳐서 골고루 기술되어 있어서 시대적 편향이 적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내용 분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싶다. 한국의 경우 학습자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점차 내용이 간략화되고 있으며 평가 역시 쉬워지고 있어서 역사지식이 알아지는 우려가 있음은 유감이다.

본연구노트에서는 위 교과서의 근대사 기술을 비판하면서 논쟁을 벌여보고자 한다.

- 
- 2) 현명철,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 : 「개항기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30, 2008 : 「조선 총독부 시기의 역사교과서」, 『한일수교50년,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검토2』, 한일관계사학회, 267~298쪽.

## 2. 근대사 기술의 논쟁점

### 1) 메이지 초기의 조일관계

일본사 273쪽	<p>〈메이지 초기의 대외관계〉          신정부는 발족과 동시에 조선에 국교 수립을 요청하였으나,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조선은, 일본의 교섭 태도를 불만으로 여겨 정식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p>
-------------	--

#### [검토내용-사실관계 오류 및 문제점]

(1) 신정부는 발족과 동시에 조선에 국교수립을 요청하였는가.

아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막부 시절의 대조선 외교 관계를 ‘구폐(막부 시절의 폐단)’로 규정하였고, 쓰시마에 명하여 왕정복고를 알리는 동시에 구폐를 척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미 조선과의 외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발족 당시 국교수립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국교수립을 요청하였다는 근거는 사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위 문장의 처음은 “메이지 신정부는 막부 시절의 대조선 외교 관계를 ‘구폐(막부시절의 폐단)’로 규정하였고, 쓰시마에 명하여 왕정복고를 알리는 동시에 구폐를 척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교수립을 요청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2) 조선은 일본에 대해 쇄국하고 있었는가. 또 정식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일까.

조선은 일본에 대해 쇄국하고 있지 않았다. 왜관에는 500명에 달하는 쓰시마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869-1873년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60여척의 일본 선박이 입항하고 출항하고 있으며, 이 선박으로 평균 연인원 1160여명의 일본인들이 출입국하고 있었다<sup>3)</sup>. 아울러 연평균 약 50명

의 조선 표류민이 쓰시마-왜관-동래부를 거쳐서 고향으로 송환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교 수립을 요청하였다거나 조선이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다는 기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선은 서양에 대해서는 쇄국을 하였지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쇄국하고 있지 않았다.

정식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1868년 12월, 쓰시마 번주가 대차사를 파견하였을 때, 동래부는 수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이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정식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은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다. 대차사는 노인(路引-도항증명서)과 서계에 조선이 준 도장이 아닌 메이지 정부가 주조한 신인(新印)을 사용하겠다는 것과, '대마주 태수 종의달'의 직함을 '좌근위소장 대마주태수 평조신의달'로 변경하겠다는 것, 대마도주가 예조참판과 등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교섭 내용은 황제국가인 메이지 정부의 '칙'이므로 조선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게 되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던 것이다. 결국, 메이지 초기의 외교적 갈등(대수대차사 서계 수리를 둘러싼 갈등)은, 기존의 외교 관계를 '성신지교'라 생각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동래부와, 기존의 외교 관계를 '구폐'라고 판단한 메이지 신정부의 명령을 배경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였던 쓰시마번의 대립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시 동래부는 쓰시마번의 배후에 있는 메이지 정부의 태도와 막부의 붕괴 소식에 당혹해하였다. 동래부는 쓰시마번(대마주)의 요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달래면서, 전통적 우호를 강조하여 서계의 수정을 책유하였다. 세견선 무역은 쓰시마에 이익이 많은 것이었다. 접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쓰시마의 손실이었다. 따라서 부산 왜관에는 여전히 세견선이 들어와 교역을 하고 있었으며 표류민 송환도 지속되고 있었다. 쓰시마를 달래기 위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후한 접대(기미정책)가 이루어

3) 현명철,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 2015년 9월 참고)

어졌다고 보인다.

→ 따라서 위 부분은 “기존의 외교 관계를 ‘정신지교’라 생각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동래부는, 기존의 외교 관계를 ‘구폐’라고 주장하면서 이득을 노린 쓰시마의 일방적 개혁안을 철회하였다”. 라고 기술되어야 한다.

이후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쓰시마의 경제적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동래부는 격식에 맞는 서한을 가지고 온 세견선과 표민영래선에 대해서는 전통적 관례에 따른 접대를 다하였으나, 격식에 어긋난 도장을 날인한 세견선과 표민송환선은 퇴각시켜서 수정해 올 때까지 접대를 미루는, 원칙에 입각한 전략을 택하였다.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도 조선은 평화를 원하지만 공격해 온다면 최선을 다해 막을 뿐이라고 원칙적으로 응대하면서 쓰시마의 역할이 양국의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었느냐고 책유하였다. 쓰시마는 관례에 따른 서계와 노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접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성립하고서도 전통적인 관례는 1872년 기유약조 체제가 붕괴하기까지는 유지되었다.

1871년 폐번치현 이후, 일본 외무성은 세견선 무역을 중지시키려고 세견선 폐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외교에 관한 일체를 외무성이 장악하였다. 쓰시마에는 외무성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조선과의 외교 창구가 외무성으로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왜관의 쓰시마 상인들은 폐번치현 후에도 조선과의 무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동래부의 상인들도 이를 지지하였다. 외무성의 눈을 피하여 세견선 무역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를 찰지(察知)한 외무대승 하나부사는 1872년 9월 왜관에 건너와 세견선의 폐기와 대관소 폐지, 대관들의 강제 귀국과 재판에 회부 그리고 표류민 송환에서 영래서계의 폐지를 단

행하였다. 아울러 쓰시마가 조선에 진 빚을 일괄 처리하겠다고 통고하였다. 왜관에는 외무성 관료가 부임하였다. 이로써 양국의 전통적 외교 의례 즉 쓰시마를 매개로 하는 조선후기 한일관계 시스템의 붕괴는 현실화되었다.

동래부의 입장에서는, 무역을 위해 쓰시마인들에게 빌려 준 접대소에 외무성이 쓰시마인을 몰아내고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을 뿐이며, 폐번치현의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는 않았다. 동래부는 외무성에 의한 쓰시마의 부채 상황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는 쓰시마가 직접 상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추후 쓰시마의 재등장을 바라는 강력한 희망을 표현한 것이었다.

왜관의 외무성 관리는 세견선의 폐지는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무역에 서계도 필요가 없다고 폐지를 통고하였다. 표류민 송환에도 서계가 따라오지 않게 되었다. 세견선의 폐지와 표류민 송환에서 서계가 없어진 것은, 왜관의 중요한 기능인 접대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유약조체제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임관(훈도와 별차)들은 임소에서 철수하였으며, 소통사만이 남아서 외무성 관료들과 협상을 하는 모습이 전개된다. 즉 외교관계의 격이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 절충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왜관의 외무성 관원들도 외무성의 지시에 따라서 왜관 폐쇄는 피하고자 하였기에 조선의 출입국 국법을 준수하여 조선이 준 도서를 날인한 노인을 발행하여 선박을 왕래시켰고, 선박들은 조선의 문정에 순응하였으며, 표류민을 꾸준히 송환함으로 명분을 축적시켜나갔다. 외무성 쓰시마 출장소는 비선 노인만을 발급하였다. 표류민도 비선을 통해 송환하였다. 처음에는 대선이 비선 노인으로 입항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갈등도 있었으나, 1872년 12월, 대·소 모든 선박이 비선 노인을 갖고 입항하도록 동래부는 묵인·합의하였다. 물론, 비선을 통해 표류민을 송환하였을 경우에 관례적인 접대(답례)를 행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표민 송

환 서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왜관의 외무성 관원들도 접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은 신생 메이지 일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막부의 멸망과 메이지 정부의 수립, 그리고 대마주의 소멸이라는 일본의 변화를 인정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였다. 대마도인들이 돌아간 후 왜관은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원수도 500여명에서 70여명으로 줄어든다. 폐가(廢家)도 증가하였다. 왜관의 외무관료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조선의 국방력으로는 일본을 당해낼 수 없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것은 조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래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호를 원하지만 만일 일본이 공격해 온다면 모든 힘을 다해 싸울 준비도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훈련을 보여주고 침략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섭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사실이다. 쓰시마번의 폐지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대화 상대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적례(대등)관계가 유지된다면 국가 간의 교섭도 가능할 것이라는 대화가 왜관에서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 2) 1873년의 정한론 정변

일본사 273쪽	<p>&lt;메이지 초기의 대외관계&gt; 1873(明治6)년, 유수정부 수뇌인 사이고다카모리[西郷隆盛]·이타가키다이스케[板垣退助] 등이 정한론을 주장하였으나, 귀국한 오쿠보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였다<sup>(㉞)</sup>.</p> <p>(㉞) 유수정부는 사이고를 조선에 파견하여 개국을 압박하고, 조선 정부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무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강경책을 일단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와쿠라사절단에 참가하여 귀국한 오쿠보도시미치·기도다카요시 등은 내치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논쟁은 오쿠보의 승리로 돌아갔고, 사이고등 정한파는 하야하였다.</p>
-------------	--

일본사 274쪽	<p>〈신정부에의 반항〉 무진전쟁에서 정부군에 가담하여 싸웠던 사족 중에는 그들의 주장이 신정부에 반 영되지 않는 것에 불평을 갖는 자가 적지 않았다. 1873년의 정한논쟁은, 이러한 불 평사족의 지지를 얻은 것이었다. 정한론이 부결되자 西鄉隆盛·板垣退助·고토쇼지 로·에토신페이·소에지마다네오미 등 정한파 참의는 모두 사직하고(명치6년의 정 변), 다음해부터 이들 사족의 불만을 배경으로 정부 비판 운동을 시작하였다.</p>
-------------	---

### [검토내용-사실관계 오류 및 문제점]

1873년의 소위 ‘정한론 정변’이라는 것은 ‘메이지 6년의 정변’으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드러난 표현이나 선전에 있어서 조선 문제가 부각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실상은 외유파와 유수파의 정권 다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후에도 정한을 주장하였다는 유수파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반정부활동이 계속되어 서남전쟁으로 발전함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즉 정한파와 반정 한파라는 정책의 다툼으로 본다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본질은 외유파와 유수파와의 권력 다툼이었으며, 외유파도 해외팽창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71년 폐번치현으로, 메이지 일본은 번벌정부의 틀을 벗고 중앙 집권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로써 군사와 징세의 권한까지 장악한 메이지 정부는 다음 달 청나라와 수호조규 및 통상장정을 체결하였다. 외무성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과의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에 청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국제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10월에는 이와쿠라도모미[岩倉具視]를 특명 전권으로 하는 대규모의 歐美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사절단 파견 이후, 외무성은 왜관 정리를 계획하여 왜관에서 구 쓰시마출신의 상인들을 철수시키고자 하였고, 1872년 9월에 외무대승 하나부사(花房義質)가 왜관 정리를 단행하였다.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이해되고 있으나<sup>4)</sup>, 사료를 검토해 보면, 이때 오히려 두 나라 사이에는 상호 이해의 분위기가 조차 감지된다. 즉, 불확실성이 해결되었다는 인식도 감지되는 것이다. 새로이 한일 간에 외교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하나부사[花房義質]가 증기선을 조선의 관리들에게 공개하고, 조선 관리들이 하나부사가 타고 온 증기선을 견학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증기선에 감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조선의 임역과 동래부는 쓰시마 영주가 소멸되고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왜관에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조선과의 갈등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사료상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상호 이해를 하고 있는 듯한 대화가 보이며 서로 충돌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메이지 정부가 힘을 배경으로 조선을 복속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왜관 접수 후 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우호적이었던 것은, 왜관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조선을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교두보로서 왜관을 확보하고 조선의 군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음도 사실이다. 아무튼, 당시 일본 외무성은 조선에 대해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었다.

일단 왜관을 확보한 메이지 정부는 조선과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1873년에는 전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징병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일본의 농민들은 입대하게 되면 조선이나 타이완 정벌에 동원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프러시아를 모범으로 국민군을 편성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조선·타이완에 국위를 선양할 ‘무대’를 만들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징병령이 공론이 아니라 현실의 급무임을 강조하였다.

왜관을 통해 조선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메이지 정부로서는

4)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전게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쟁의 구실만 찾으면 되었다. 그리하여 1873년 10월 사이고[西郷隆盛]는 자신이 조선에 가서 죽음으로 전쟁의 구실을 만들겠노라고 사절을 자청하였다. 이는 목숨을 걸고 전쟁의 구실을 얻을 터이니 그 사이에 메이지 정부는 전쟁 준비를 완료하여 출병하라는 것이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사이고 사절 파견은 메이지 천황의 결재까지 얻었으나, 이와쿠라 사절단이 귀국하면서 정쟁의 대상이 되어 결국 실현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정치 싸움으로 결국 메이지 정부는 분열하였다. 사이고를 비롯한 정부 수뇌는 사직하였고, 오쿠보를 중심으로 사절단에 포함되었던 인사들이 정권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정한론 정변」 또는 ‘明治6년의 정변’이라고 한다. 결국, 사이고 파견은 정한(征韓)의 구실을 얻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일본에서 정쟁이 발생하였던 1873년 단계에서도 12건의 표류민 45명(시체3구 포함)이 송환되었으며, 조선이 왜관에 거류하던 외무성 관리를 통해 대포 4~5문 정도의 구매를 요청하였고, 외무성의 질의에 육군성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대포 6문(70엔(=한전52관문=520냥)/1문)을 포함하여 7연발 소총 30정, 피스톨 10정, 화약과 포탄 등을 조선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던 사실이다. 물론 무역도 행해지고 있었다). 외교적 대화도 합의를 보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주목해야 한다.

외유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당시 왜관에서 꼭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 꾸준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일부 외무관료들이 국제법 인식을 바탕으로 서양 열강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무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당시의 정세 판단까지 포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 예를 들어 1873년 7월 조선의 수입은 구리, 당목면을 비롯하여 4719관, 수출은 미역, 목면, 우피 등 5043관이었다(조선외교사무서).

### 3) 조일수호조규

<p>일본사 274쪽</p>	<p>&lt;明治초기의 대외관계&gt;                  그 후, 1875(明治8)년 강화도 사건<sup>(註)</sup>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을 압박하여 다음해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맺어 조선을 개국시켰다<sup>(註)</sup>.                  (註)일본 군함 운요호가 수도 한성 부근의 강화도에서 조선측을 도발하여 전투로 발전한 사건                  (註)일주수호조규는 부산 외의 2항(인천, 원산)을 열게 하고, 일본의 영사재판권과 관세면제를 인정시키는 등 불평등조약이었다.</p>
<p>세계사 300~301쪽</p>	<p>&lt;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gt;                  조선에서는 당쟁등에 의한 정치적 동요가 계속되었으며, 19세기에는 흥경래의 난을 비롯한 민란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다. 17세기 이래 조선은 외교관계를 청국과 일본 두 나라에 한정하고 있었다. 사회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1860년대에 들어서자 국미제국은 조선에 대해 개국을 압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종의 섭정이었던 대원군은 이를 거부하고, 양이에 노력하였다. 일본은 75년에 강화도 사건<sup>(註)</sup>을 일으켜 이를 계기로 조선을 압박하여 다음해 76년 영사재판권 등을 포함하는 불평등한 일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맺어, 부산 등 3개 항구를 개방시켰다.                  (註)일본의 군함이 조선 연안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일으켜 강화도 부근에서 양국군이 충돌한 사건</p>

#### [검토내용-사실관계 오류 및 문제점]

(1) 강화도 사건이 조일수호조규를 맺게 된 유일한 이유일까.

강화도 사건은 일본이 변리대신을 파견하여 조선을 압박하게 되는 계기는 되었으나 조일수호조규를 맺는 이유는 되지 못하였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변리사절의 또 하나의 이유 즉 지난해 일본이 보낸 서계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이 조일수호조규를 맺게 된 이유였다. 지금까지 강화도사건(운요호사건)과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관련성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왔다고 보인다. 반면에 그동안의 교섭이나 1874년 9월의 합의, 이 합의에 따른 일본의 서계 제출과 조선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외교적 사건은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강화도 사건은 조일수호조규를 맺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신헌과 구로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결과 역시 운요호사건에 대

해 크게 시비를 가리어 사과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 일본이 보낸 서계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실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선이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지금이라도 조약을 맺고 우호를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고 서둘러 조약 체결로 넘어가는 것이다. 구로다 사절 파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제안해 본다.

→ 폐번치현으로 조선과의 외교 무역을 담당할 쓰시마번이 폐지되고 왜관에는 외무성 관료가 배치되었다. 외무성 관료들은 한편으로는 전쟁의 위협을, 다른 편으로는 표류민 송환을 계속하면서 기유약조를 대신할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동래부 역시 대화상대가 없어진 상태에서 국가간의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고종 친정 이후 정부는 일본과 협약한 관계가 지속되거나 전쟁의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교섭을 진행시켰고, 그 결과 1874년 9월, 훈도 현석운과 모리야마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일본이 보낸 서계 내용의 강압성과 모리야마의 태도로 말미암아 접수되지 않았고, 일본은 힘을 과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요호사건이 일어났다. 구로다 사절은 전쟁의 대의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운요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서계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변리를 명분으로 파견되었다.

## (2)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이 개국한 조약인가.

조일수호조규를 맺어 조선을 개국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조일수호조규는 일본과의 우호를 확인한 조약이고, 쓰시마를 매개로 이루어졌던 양국간의 외교를 직접 외교로 바꾼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이 개국을 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최혜국대우를 요청하였을 때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개국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어필하였던 점이나 제1차 수신사의 일본에서의 활동 및 언급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사료에서도 명확하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청국과 일본 두 나라와 우호를 유지

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다만, 조일수호조규가 1880년 조선이 개국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서양 열강과는 처음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개국의 길로 나서게 되었고 여기에 일본이 큰 역할을 하였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서술을 제안하고 싶다.

→ 조일수호조규를 맺어 두 나라의 우호를 확인하고 쓰시마를 매개로 하는 외교에서 양국 정부간의 직접 외교를 맺는 데에 성공하였다. 조일수호조규는 훗날 조선이 개항을 선택하는 기점이 되었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기유약조체제의 붕괴로 두 나라 사이에는 점차 힘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전쟁을 피하고자 하였던 양국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었음은 당연하다. 이를 해결하고 두 나라 사이의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합의가 고종 친정 이후 모색되었다. 고종은 일본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나라에서 귀국한 사절들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을 피하고자 노력하도록 주문하였다. 일본 외무성의 온건파도 평화적으로 외교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왜관에서 암행어사의 부관(대범곡)과 일본 외무성 관료(모리야마 시게루) 사이에 양국의 우호가 단절된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대등한 외교를 유지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신임 훈도 현석운과 별차 현제순이 부임하면서 해결책이 도출하기도 하였다(1874년9월). 금위대장 조영하도 친서를 모리야마에게 보내어 도해역관의 파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현석운-모리야마의 타협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서계를 보내왔으나 이 서계는 양국간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일본의 서계는 일방적으로 조선이 대수대차사 서계를 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비난, 접수하지 않은

것이 간악한 무리들이 중간에서 옹폐한 것이라는 인식, 도서의 반납, ‘대일본’, ‘황상’의 자구 사용, 훈도를 넘어서 왜관 관수와 동래부사의 등대 등 오랜 전통과 지난 함의를 무시한 내용이었고, 또한 종의달이 예조 참판과 등대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결국 조선이 계속 거부해 온 논쟁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가 개시된 것이다. 게다가 모리야마가 전통적 서계접수 의례를 무시하겠다고 주장하였기에 동래부는 부사의 재량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신임 동래부사는 중앙의 지휘를 얻어야 한다고 연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모리야마는 서계가 즉시 수리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귀국하였으며, 이후 일본은 모리야마의 강경책을 받아들여 전쟁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부산에는 드디어 일본 군함이 조선의 국법을 어기고 입항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단속에 나선 부산진의 전선(戰船)을 앞보았으며, 조약이 없으므로 조약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우기고 만일 조선이 공격한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쟁의 구실을 얻고자 하였던 일본과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조선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나타나는 시기였다. 정부로부터 우호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동래부는 이들을 달랬다. 먼저 전단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이 전쟁을 피하고자 함을 파악한 일본의 태도는 점차 과감해져 (양력) 1875년 5월에는 운요호가, 6월에는 다이니테이보[第二丁卯]호가 왜관 앞바다에 입항하였으며, 테이보[丁卯]호는 문정을 위해 훈도와 수행원 18명이 승선하였을 때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무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1875년 9월에는 운요호가 서해안을 북상하여 강화도 앞바다에서 영종진을 파괴하는 등 전쟁을 도발하였다.(운요호사건)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보고받고, 조선이 왜관을 폐쇄할 것으로 생각하여 왜관에서의 철수를 준비하고 전쟁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10월3일에는 일본 군함 카스카[春日]함이, 27일에는 모순[孟春]함이 부산에 입항하여 예포와 답례포를 발사하였으며, 11월9일에는 일본 해군 병사가

설문을 벗어나 초량리로 난입하여 조선의 반응을 살피고, 12월13일에는 일본 해병대 58명이 무장을 하고 설문 밖으로 나와 조선 병사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등,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려고 도발하였다. 조선이 무력을 사용하기를 바란 행동이었다.

운요호 사건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정한여론이 일본 열도를 뒤덮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고 전쟁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 청나라의 개입 가능성, 조-청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장기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일본 내부의 분열과 서양 열강의 여론 등을 고려한 온건파의 주장도 강력하였었다. 무엇보다 조선 조정이 인내를 갖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였기에 평화적 해결 방안은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다. 조선에서도 척왜론이 강력히 등장하였으나 조정은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며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말 것을 강력히 명령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구로다 사절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물론 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전쟁에 돌입한다고 전쟁준비를 갖춘 상태에서의 파견이었다. 변리대신이라고 함은 작년 일본이 서계를 보냈으나 조선이 모리아마를 응접하지 않은 이유와 운요호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변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로다 사절 파견은 국사(國使)를 파견하지 않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며 1868년 메이지 정부의 성립 이래 국사(황사) 파견론이 실현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구로다의 파견을 오랜 외교적 교섭 과정의 연속에서 파악하지 않고 바로 운요호 사건과 직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판이 필요하다.

구로다의 사절 파견에 앞서서 외무관리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부산에 도착하여 훈도에게 일본 정부가 전권변리대신을 파견한다고 전하였다. 구로다 사절단은 1876년 1월 6일 도쿄(東京)를 출발하여 부산에 정박하였다가 25일 남양부 도리도 앞바다에서 회합하였고, 2월 4일에는 향산도에 정박하였다. 2월 5일 모리아마가 대관의 응접절차와 숙소문제

를 사전협의하기 위해 상륙하여 접견부관 윤자승과 예비회담을 가졌다. 윤자승은 이미 묘당의 지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허락하고 사절단의 숙소를 마련해 주었으며 빨감과 장목 등도 모두 아끼지 않고 허락하였다.

2월 11일 제1차 회담이 열렸다. 구로다는 모두 발언에서 “양국에서 대신을 파견한 것은 대사를 변리하기 위한 것이며, 또 구호를 중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담 의제를 밝혔다. 즉 운요호 사건과 외무성 서계가 수리되지 못한 문제를 따져보고 중수구교를 이루자는 것이었다. 구로다는 먼저 운요호 사건을 언급하였다. 일본 국기를 게양한 일본 함대를 조선이 공격한 것은 조선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신헌은 사전 통고 없이 조선의 방수지역을 무단 침범한 운요호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였으며 영종진을 파괴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운요호의 과실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구로다는 더는 언급할 수 없었기에 작년 외무성 서계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신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우호를 맺으려는 자리이고 서계를 받을 것이므로 거슬러 제기하지 말자”고 덮어버린다. 두 가지 대사를 더 따져 볼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중수구교를 이루는 것뿐이었다.

다음날 2월 12일 제2차 회담이 열렸다. 이날 모리야마가 부산에서의 교섭 경위를 적은 문서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하였고 구로다 역시 메이지 6년의 정변(정한론 정변, 1873년)과 사가의 난(1874년)을 언급하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약이 맺어져야 하는 당위를 역설하였다. 그리고는 13개 조관으로 된 조규 초안을 제시하였다. 조규 초안은 바로 정서되어 조정으로 보내어졌다. 조선 조정은 조약 체결권자를 ‘일본황제 폐하’와 ‘조선국왕 전하’로 적시한 것은 대등하지 않으므로 각각 ‘일본국’과 ‘조선국’으로 고치고 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접견대관에게 위임하므로 재량껏 결정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2월19일 신헌은 문병을 온 미야모토[宮本]와 노무라[野村]를 만나 조

규 초안의 각 조관을 심의하였다. 일본 대표단도 조선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약 심의과정은 비교적 순탄하였다. 정부에서 초안을 검토한 공식 문서는 20일 도착하였다. 신헌이 요구한 바와 정부가 요구한 바가 거의 동일하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조규 책자를 정서할 때가 되어서 일본이 국왕의 친필서명을 요구하여 난관에 부딪혔다. 이 역시 강경한 입장이었던 모리야마의 책동이라고 판단한 신헌은 모리야마를 배제하는데 성공하여 결국 2월27일 연무당에서 신헌과 구로다가 조약에 서명하였다. 2월11일 1차 회담이 열린 후 16일만의 일이었다. 일본 사절은 28일 강화부를 떠났으며, 신헌과 윤자승은 3월1일 어전 복명하였다.

조일수호조규는 메이지 정부가 성립하면서 어긋난 한·일간의 외교를 일단 회복시켰다는 의미를 갖으며, 쓰시마를 매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간의 직접 외교를 이룬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조약 체결 즉 개항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발점이었다. 물론 메이지 정부가 성립하면서 국시로 나타난 대외팽창과 국권확장을 이루기 위한 조선침략의 의도는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동시에 문명주의에 입각하여 근대 국제법적 틀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가지려고 노력하였음도 중시된다. 또한 일본의 선의를 강조하기 위해 침략성을 부정하였음도 주목된다. 이는 조약문에서 ‘황’, ‘척’의 글이 빠지고, 제1관의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대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조약이 그렇듯이 조일수호조규 역시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였다.

조일 수호조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일본은 구로다 사절을 파견하여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조일수호조규는 메이지 정부가 성립하면서 어긋난 한·일간의 외교를 회복시켰다는 의미를 갖으며, 쓰시마를 매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간의 직접 외교를 이룬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조약 체결 즉 개항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발점이었다.”

### 3. 나가며

1998년 필자가 역사교과서를 분석하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詳説 日本史B』 교과서의 내용 중 근대사에 관한 부분은 별 변화가 없다. 이는 한국의 교과서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총독부 시절,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항기 이래 조선 지배층이 무능하고 부패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국교를 요청하였는데도 쇄국에 물들어서 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무례한 나라, 서계(편지)를 보냈음에도 읽어보지도 않고 관례에 어긋난다고 무조건 거부하였으며 세계사의 흐름에 무지한 조선의 외교관을 그려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이 무지한 조선을 개국시켜 문명개화의 길로 이끌었다고 썼다고 자랑하였다. 당시 조선의 주체적인 고민과 결정은 사장되고 무시되었다. 이후 한국 지식인들도 공화제를 이루기 위해 개화기 조선왕조 지배층의 결정을 이해하려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개국은 일본의 침략 과정일 뿐이었다. 지금도 개국은 타율적이며 주체적 결정이 아닌 것처럼 기술되어 교육된다. 일본 교과서를 분석하고 비판하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교과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주체적인 고민과 결정을 무시한 교과서는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본 연구노트는 개항기 선조들의 고민과 결정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개항사를 교과서에 기술하고 싶은 나의 조그마한 소망을 담아 보았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설계도나 비망록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끝)